

정유, 황함량 규제로 탈황설비 증설 고심

정유기업들이 휘발유·경유 등의 황 함유량을 줄이기 위한 탈황시설 증설시기 등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.

환경부가 황 함유량을 정유기업별로 공개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설비증설에 적잖은 투자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.

정유업계에 따르면, 정유기업들은 탈황설비의 조기증설에 대해 내부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했다. 당초 환경부와 정유기업들은 2005년 또는 2007년까지 경유의 황 함량을 최고 50ppm 이내로 떨어뜨리는 방안을 협의해왔다.

그러나 경유의 황 함량을 50ppm 이하로 낮추려면 각 정유기업별로 수천억원, 정유업계 전체로는 4조원 정도의 자금이 소요될 전망이다. 최근 과잉생산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정유기업들이 투자시기와 규모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.

정유기업들은 규제방침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황 및 벤젠 함량 축소 경쟁을 벌이기보다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쟁기업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.

특히, 환경부의 발표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정유기업이 대대적인 탈황설비 공사에 착수하게 되면 치열한 시설경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.

<Chemical Daily News 2002/ 07/ 26>